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9 | 2025.06.23 (2025.06.16~2025.06.2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를 통해 국민 편의·안전을 향상하고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의 2025년도 과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전력망 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에 위임사항, 입지선정의 기간,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의 적용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 신장식의원 · 한창민의원 등 32인)**」 ,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 · 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 · 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 · 경보 · 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 ,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안(권향엽의원 등 10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환노위>, <국토위> 등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되며, <인사청문특위>에서 국무총리후보자(김민석) 인사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5년 하반기 탄력세출·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기획재정부) 7
-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공고 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교육부) 1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교육부) 1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0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1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2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농림축산식품부) 12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13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산업통상자원부) 13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1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익의원 등 13인)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 신장식의원 · 한창민의원 등 32인) · 15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17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18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18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1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19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최민희의원 등 13인) 19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20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20
-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 21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 2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1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2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 23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4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24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6인) 2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25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2인) 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6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2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소송]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5년 하반기 탄력세율·할당관세 운용방안」 발표 - (유류세)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2개월 연장 -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6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15% 6개월 연장 - (할당관세) LPG·가공과일 6개월 연장, 고등어 신규 적용,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2025-06-16
-------	--	------------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25.6.30.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8.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임.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②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이번 연장 조치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일반, LNG)는 10.2원/kg(인하전 12원/kg), 유연탄은 39.1원/kg(인하전 46원/kg)의 탄력세율이 적용됨

③ 자동차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기본세율 5%→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④ LPG 및 가공과일 0% 할당관세 6개월 연장

정부는 서민 취사·난방·수송비 부담 완화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임. 또한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25.6.30. 종료 예정인 으깬 감귤류, 과일카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25.12.31.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며, 특히 과일카테일의 경우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5천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 물량도 확대(5천톤 → 7천톤)할 계획임

⑤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계란가공품 물량 확대

정부는 노르웨이산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최근 고등어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고등어(기본관세율 10%) 1만톤에 대해 '25.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음. 또한 '25.12.31.까지 0% 할당관세 적용 예정인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는 최근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기존에 설정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4천톤)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감안하여 적용 물량을 확대(4천톤 → 1만톤)하기로 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공고 시행

-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로 국민편의·안전 향상
- 인공지능 전환 기기 수요 창출

2025-06-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디바이스)를 통해 국민 편의·안전을 향상하고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의 확산을 지원하는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의 2025년도 과제 공고를 '25년 6월 19일(목)부터 7월 10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는 기기 자체에 내장된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를 기반으로 연산방식(알고리즘), 인공지능 모형 등을 구동하여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①실시간 서비스, ②사용자 특화, ③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의 일상과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과기정통부는 동 사업을 통해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NPU) 기업, 기기(디바이스) 개발 기업 등의 수요공급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공모를 통해 4개 분야(안전, 가전, 교통·물류, 제조) 6개의 과제를 수행할 기업·기관을 선정함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기반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실증」 사업 개요>

- (지원 내용) ①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을 희망하는 기술수요(예: 기기기업)·공급(예: 팹리스, 인공지능 모형 기업 등) 매칭, ②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기술검증, ③ 인공지능 전환 기기(AX디바이스) 실증 및 상용화 지원
- (수행 주체) 운영기관(기업 간 연계, 제품 상용화, 기술 검증 지원), 수요기업(기기<디바이스> 기업), 공급기업(국산 신경망 처리장치 기반의 기술 공급기업·기관 등)

과기정통부는 지원 분야 선정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국산 신경망 처리 장치 기업, 기기(디바이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전환 파급력이 높아 국민 편의·안전 향상 체감이 높은 분야를 선정하였음

<분야별 국민 편의·안전 향상 시나리오(예시)>

분야	주요 내용(안)
안전	○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한 산림·도시 안전, 치안 체계 확보
가전	○ 로봇청소기 등 가전에 신경망 처리 장치(NPU) 탑재를 통해 지능형가정 서비스 구현
교통·물류	○ 영상관제 인공지능 폐쇄회로 텔레비전(AI CCTV)을 활용한 도로교통 점검(모니터링)
제조	○ 비전검사 기반 불량 검출 인공지능 카메라 제어 체계

본 사업은 각 과제당 2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제품 설계·최적화, 기술검증 등을 진행하고 이후에는 개발한 인공지능 전환 기기(AX 디바이스) 시제품 검증·실증을 통해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의 시장 확산·상용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6-21 시행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63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55호, 2025. 6. 2.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계약학과 등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 계약학과와 유형을 명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6-21 시행
-----	---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감소 추세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을 유치원의 취학권역,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등의 지역 중에서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6-18 시행
-----	--	---------------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담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하는 한편, 환경전문공사사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6-18 시행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중 **기술인평가서 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6-18 시행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의 수입검사 방법과 무상 수거량을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생용품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위생교육의 면제 요건과 위생용품의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6.17. ~2025.07.27.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수수료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증 종류의 정비 (안 제4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1호 서식)
 - 인증 종류 다양화(최초인증, 인증연장, 재인증)에 따른 평가 방법(별표 1 신설) 및 신청서 서식 정비
- ②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정비 (별표2)
 -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증 종류가 정비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에 따른 수수료 규정 개정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전화: 044-205-4518, 팩스: 044-205-8932\)](tel:044-205-4518)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7. ~2025.07.28.
---------	-----------------	-----------------------------

식품 및 외식 분야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의 경우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등으로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규제 및 인증 제도 정비를 위해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의 폐지 (안 제2조, 제5조, 제22조의2, 제25조, 제36조 개정)
 -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의 원산지 인증제’ 운용의 근거규정을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제’로 개정하여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② 대한민국식품명인 관련 인용규정 정비 (안 제14조 개정)
 - 법률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안 제14조제5항의 인용규정을 인용하는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전화: 044-201-2116, 팩스: 044-868-7907\)](tel:044-201-2116)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6.16.
~2025.07.28.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제도 정비,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044-201-6798, 팩스: 044-201-6802)

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18.
~2025.07.3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

※ 문의처 :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전화: 044-201-6704, 팩스: 044-201-669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5.06.19.
~2025.07.29.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확충을 위하여 국가 주도의 새로운 거버넌스 신설, 초장기 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인허가 의제 확대 등 인허가 신속처리,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보상·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844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전력망 위원회의 구성, 실무위원회에 위임사항, 입지선정의 기간, 부대공사 인허가 특례의 적용 범위, 선하지 매수 청구 기한, 주민지원 특례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전화: 044-203-4756, 팩스: 044-203-4756)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6.19.
~2025.07.30.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화장품의 날로 정하는 한편,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이 위해한 경우 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20901호, 2025. 4. 1. 공포)됨에 따라, **화장품의 날과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2025-06-16 발의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가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3인)	2025-06-16 발의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현장에서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미연동 합의를 사실상 강요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 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의 예외사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안 제3조제5항 및 제19조제4호)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 신장식의원 · 한창민의원 등 32인)	2025-06-17 발의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명시하여 노동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을 위한 연대를 보장하고 있음.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인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법원은 학습지노조 판결(대법원 2018.6.15.선고 2014두12598,12604 판결)에서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이라는 기본관점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2021년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제87호, 제98호 협약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자영노동자(self-employed worker)도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제3436호, 제3439호 사건 등에서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한 바 있음

헌법 제33조제1항,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노동조합법 또는 현행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내지 유사한 범주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상 ‘노무제공자’는 현행법상 ‘사업자’로 규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영노동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을 현행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하여, 강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결한 바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의 범위에서 실질적 ‘노동조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2025-06-17 발의

최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탁·운용 기능의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가상자산은 자산운용, 거래, 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지 않아 신탁업자에 의한 보관 및 수탁 운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신탁재산으로 명시하여, 신탁업자가 이를 수탁·보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수탁 시장의 제도화를 통해 연기금·기관투자자의 안정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3조제1항제8호 신설)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2025-06-18 발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대한 규율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물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해외직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외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에 따라 광고형태가 진화하면서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물 검색이나 구매이력 등을 수집하고 반영하는 맞춤형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의 활성화에 따라 온라인 쇼핑물 외의 사이트에서 소위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에게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광고주의 상품을 추천하고 홍보하는 일명 뒷광고도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부당한 이용이나 유출 가능성, 기만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통신판매업자 등에게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맞춤형 광고 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또는 인플루언서 등이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을 추천·보증하는 형태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규율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2인)

2025-06-19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정 사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홈페이지에 간략한 안내만을 게시한 것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추가적인 유출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고,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유출등이 확인된 정보주체 및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 34조제2항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025-06-17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형 이동 수단 산업은 탄소중립 달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뛰어나므로, 미래형 이동 수단에 관한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반도체 관련 투자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2025-06-18 발의

현행법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정부배당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훈령인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배당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배당협의체에 관한 사항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 결손을 메우고자 과도한 배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배당협의체의 협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65조의6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2인)

2025-06-17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한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1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2025-06-19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정부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태의 위험성과 2차 피해의 가능성에 대한 경보·예보를 실시하지 않았고,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극적 대응과 미흡한 피해구제 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우려와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부과와 침해사고 관련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7, 제76조제1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2025-06-20 발의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익을 넘어 국가의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전략기술로서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국의 경우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 등이 합작하여 인공지능 인프라 등에 약 730조원을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 EU는 ‘AI 기가팩토리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약 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효율적 알고리즘으로 딥시크 등 고성능 인공지능모델을 구현하여 인공지능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인공지능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을 제정(2025년 1월)하여 인공지능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한 내용에 관하여는 다소 부족하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인공지능산업의 과감한 진흥에 방점을 둔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범국가적 산업 육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강국으로의 도약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2025-06-16 발의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임원의 직위에 외국인을 선임할 경우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가능성 및 외국 자본·세력의 간접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신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3인)

2025-06-19 발의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게임 관련 법률과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실시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안(주철현의원 등
16인)

2025-06-17 발의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함

특히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며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은 물론,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화종별 · 선종별 · 항만별로 특화된 북극항로 활성화 전략 수립이 시급함

이에,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2025-06-17 발의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지정방식에 대하여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을 때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도매법인 한 곳이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 동안 독 · 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법인 간 경쟁 저하를 촉발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법인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고, 당초 공영도매시장 제도 도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음

이에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과 그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정가 매매 또는 수익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게 하는 한편, 동일시장 내에서 도매시장법인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2인)

2025-06-17 발의

현행법은 수·위탁 관계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존재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위반행위 존재여부 또는 손해액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3인)

2025-06-17 발의

현행법은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일반적으로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고 이를 훼손하여 침해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 권리자는 여전히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 및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 및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통해 침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확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4인)

2025-06-17 발의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미비하여 침해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5-06-19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5-06-19 발의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에 의하여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인수·합병 방식의 다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국내 법인도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도 외국인에 포함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외국 자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등)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의원 등 11인)

2025-06-16 발의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9호 등)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의원 등 16인)

2025-06-19 발의

최근 이상기후로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이 일상적으로 발생 중인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획기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인공강우는 산불 진화 자체에는 큰 효과가 없지만, 산불 예방에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기술임.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음

미국, 중국, UAE 등 해외 주요국은 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첨단 산업기술 확보 차원에서 인공강우를 적극 개발 중으로, 기술력을 확보할 경우 산불 예방은 물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현행법상 물산업 정의 규정에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여 인공강우 기술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2조제2호)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2025-06-20 발의

현행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연장 근로제도의 경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주문 증가나 업무 증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최대 1개월(연구개발의 경우 3개월)로 활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등 근로가 집중되는 시기에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이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51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2025-06-16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간정보의 기본측량성격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외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간정보의 국외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는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있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구글 등 국외기업이 지속적으로 국내 지도데이터 등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향후 관세 협상 등의 이유로 지도 국외반출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법률에 미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격의 국외 반출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측량성격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격을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건들을 명시하여 국가안보 상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 필요한 보안조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4항 · 제5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등 12인)

2025-06-16 발의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최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025-06-16 발의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인 없는 상황임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 등 외국에서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의 거래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하여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가 간 상호주의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취득 등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7조)**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2025-06-17 발의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상황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하여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외국인 등이 군사기지,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이 해당 구역·지역 등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등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에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고, 외국인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7조 및 제9조)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5-06-17 발의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경기침체 등으로 시공업체의 경영부담이 큰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급등, 금리 인상 등으로 현장의 공사비 부족 심화 및 그로 인한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공사 급등으로 민간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공사 중지 또는 계약 해지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주택 공급 위축 등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공공공사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이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는 동일하게 계약 행위가 민간 경제 주체로서 양자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되,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빠른 해결을 위해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 등으로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함 (안 제22조의4)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2025-06-17 발의

최근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 건축 관련 규제 증가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장기간 공사 중지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가 크게 변동하여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대한 계약 변경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사비 변동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만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분쟁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위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효력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다른 사법 절차를 거쳐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계약 당시에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비 변동 검증 기구 선정 등 방법 및 검증시에 제출할 서류를 사전에 계약에 명시하여 공사비 변동시 불필요한 계약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자에게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하되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에 관한 상세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분쟁절차를 단축시키고자 함 (안 제29조제12항 및 제29조의2)**

또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공사비 분쟁에 대한 조정 역할을 부여하고 공사비 분쟁에 관한 조정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에게도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권한을 부여하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조속한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116조 및 제117조)**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2025-06-18 발의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구역 내에서의 건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1971년 이래,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력한 규제로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당해왔으나 국가로부터의 보상은 미미했고, 마땅한 활용 또는 처분도 쉽지 않았음. 결국,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고령임에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구역 내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던 주민과 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개축·재축·증축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각 호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농해수위	전체회의	6/23(월) 14:00	- 법안 의결 및 상정 등
환노위	전체회의	6/25(수) 10:00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 등
국토위	전체회의	6/25(수) 10:00	- 간사 개선, 소위원장 개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	6/24(화) 10:00	- 국무총리후보자(김민석)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6/25(수) 10:00	- 국무총리후보자(김민석)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23(월) 14:00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이정문·강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6/23(월) 14:00	'효율적인 수입 꽃 검역'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아름다운 꽃 문화 만들기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6/24(화) 13:30	6.3 대선평가와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	서왕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5(수) 10:00	지역사랑상품권과 기금제도 접목 가능한가? : 민생경제 정책 제도화를 통한 정책 지속성과 재정유연성 확보를 위한 길	양부남·김현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6/26(목) 07:30	(국회의원 이병진 주최) 한·중 주요 현안 대외정책 세미 나	이병진 의원실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6/26(목) 09:30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김주영·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6/26(목) 14:00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세미나	노종면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자료집 등	6/23(월)	「Data+」 제12호(2025-12호) 발간	국회도서관	
	6/25(수)	「금주의 서평」 제734호(2025-25호) 발간		
	6/27(금)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4호(2025-11호) 발간		
	6/24(화)	「NABO 산업동향 & 이슈」 제76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16(월)	「Data+」 제11호(2025-11호)	국회도서관	
	6/18(수)	「Data & Law」 제30호(2025-5호)		
	6/18(수)	「금주의 서평」 제733호(2025-24호)		
	6/17(화)	「NABO Focus」 제113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18(수)	소송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